

수도권, 규제 이후에도 경제집중도 심화

1,000대 기업 본사 서울 54%, 경기·인천 17%

재정자립도 78%, 문화공간 대부분 몰려

“지역 균형발전정책 국책사업 추진해야”

수도권 위주 국가성장 정책을 펴온 역대 정부가 지난 1970년 뒤늦게 수도권 인구·경제 집중에 대한 규제에 나서지만 수도권 집중현상은 3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국토균형발전정책을 추진했지만 수도권 ‘쏠림’은 여전한데다, 3.1% 등 수도권이 70%를 차지했다. 반면 광주·전남 등 비수도권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은 절반에도 못미치는 29.3%였다.

최근 지역균형발전협의체의 ‘수도권 정책대응’ 연구 용역을 수행한 한국공간환경협회는 “수도권 규제완화 이전에 수도권 소재 기업의 산업고도화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에 있는 미래성장동력 분야 투자나 세계지연 등 수도권 ‘기업유지·지원정책’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경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문화공간의 수도권 집중현상도 극심하다. 지난 2006년 지역별 문화공간 현황 조사결과 공공공연장 38%, 민간공연장 58%, 미술관 36% 등 문화공간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려있다.

◇대인은 ‘지역 균형발전 정책’=전문가들은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수도권 경쟁력을 강화하는 ‘필요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의 ‘수도권 정책대응’ 연구 용역을 수행한 한국공간환경협회는 “수도권 규제완화 이전에 수도권 소재 기업의 산업고도화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에 있는 미래성장동력 분야 투자나 세계지연 등 수도권 ‘기업유지·지원정책’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경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은 물론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사업’도 대폭 수정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는 정책의 최대 수혜자는 수도권이기 때문이다.

경제규모와 산업인프라 등에서 절대우위에 있는 수도권을 비수도권과 같은 경제권역으로 분류, 지원할 경우 수도권-비수도권의 경제적 격차를 정부가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지역내총생산(GRDP) 추이 (단위: 조 원, 경상가격 기준)

구분	1985년	2006년	증가률(%)
서울	21.9	193.1	8.8
부산	6.9	48.0	6.9
대구	3.8	27.9	7.3
인천	4.0	41.0	10.3
광주	2.3(1987년)	19.1	8.4
대전	3.7(1989년)	19.5	5.2
울산	23.8(1998년)	41.5	1.7
경기	12.2	175.2	14.4
강원	3.5	23.5	6.7
충북	3.1	27.5	8.9
충남	5.7	51.1	9.0
전북	3.4	26.3	7.7
전남	6.6	41.0	6.3
경북	6.7	57.4	8.5
경남	9.4	57.7	6.2
제주	0.8	7.6	9.5
전국	87.9	857.4	9.7



24일 충남 연기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제5회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에서 수도권과밀반대 전국연대, 지방분권 국민운동, 전국혁신도시협의회 관계자 등 참가 단체 회원들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규제완화 결사 반대 비수도권 공동 대응 본격화

전국회의 결의문 채택

비수도권 전국 사회단체들이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모임을 갖고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제5회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이하 전국회의)가 24일 오후 충남 연기군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광주·전남을 비롯한 비수도권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광주시 구청장 협의회,

광주지방변호사회, 한국어성단체협의회 광주·전남지회, 전남발전연구원 등 지역의 각 단체를 비롯해 수도권과밀반대 전국연대, 지방분권 국민운동, 전국혁신도시협의회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전국회의는 공동 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지방과 합의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는 수도권규제완화를 결사적으로 반대하며,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며 “공기업 선진화 정책이 혁신도시 건설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조치와 노력을 다해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전국회의는 또 비수도권 지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규모 국민대회를 개최하는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진형 지방분권국민운동 공동의장은 “행정도시와 혁신도시를 차질 없이 건설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 계승과 개혁에 대한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희정기자 chae@kwangju.co.kr

“영산강 뱃길복원 조기 추진하라”

지역민들,李 대통령·시·도에 건의서

최근 전남도가 영산강 뱃길복원 사업의 추진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지역민들이 대통령과 광주·전남도에 건의서를 보내는 등 사업 조기 가시화를 촉구하고 있다.

재광 나주항우회(회장 나무석)는 24일 “영산강 뱃길복원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사업의 조기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채택, 이명박 대통령과 박광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지사에게 25일 발송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건의서에서 “환경오염으로 신음하고 있는 영산강의 오염원을 제

거하기 위해서는 하천 퇴적물을 대대적으로 선술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예전처럼 영산강 뱃길을 열어 지역발전의 원동력을 되찾고 영산강 문화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영산강이 이대로 방치될 경우 영원히 강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역사문화의 소중한 자원도 함께 사장될 것이다”며 뱃길 복원 사업의 조기추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영산강 뱃길이 열릴 때까지 지역민들의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민주·시·도 현안 예산 확보 협력

정가 브리핑

○민주당은 25일 오후 4시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전남도와 정책협의회를 갖고 주요 현안 및 국비 지원 사업 예산 확보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이 자리에는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도지사를 비롯, 정세균 당 대표와 송영길·박주선 최고위원 등 지도부,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총출동해 최근 광역경제권 활성화 정책 등으로 민심이 악화돼 있는 호남 지역 행거기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 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날 공동 현안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 ▲환경기술센터 건립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시도는 또 광주·전남지역 현안 과제로 ▲광역경제권 활성화 정책 등에 대한 대응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 ▲문화콘텐츠 기술연구원 설립 ▲광주 R&D 특구 지정 및 육성사업에 대해서도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다양한 지역 경제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김 위원은 전남산업단지·소촌농공단지 등에서 지역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고충을에 따른 불리한 경영 환경·금융기관 이용에 따른 애로점·불공정 거래 관행 등에 대해 수렴한 의견을 향후 국정 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한편 정책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순천시의회 상의 분리 반대

○광양지역 일부 상공인들과 기관단체들이 26일 광양상공회의소 창립 총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순천시의회가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순천시의회는 24일 “광양만권 도시통합의 필요성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도시 광역화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순천광양상공회의소를 분리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며, 광양만권 도시를 분열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U대회 재도전 지지 잇따라

○광주구청장협의회와 광주시 4개 기초의회가 광주시의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U)대회 유치 재도전을 지지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다.

구청장협의회와 동구·서구·남구·북구 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광주시의 2015년 하계U대회 유치 재도전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이번 결정은 광주가 세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을기자 dok2000@동부취재본부=지광원기자 light64@

광주신단 현안 해결 모색

○김동철(광주 광산 갑) 민주당 광주시장 위원장은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광주지역 산업단지를 둘러본 뒤, 현장에서 파악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언론재위원회와 상의하십시오. 02397-3000 www.pod.or.kr 언론중재위원회

무안 - 광주(광산, 구화산) 무안공항 직항 전세기

무안 - 정사(정가계, 원가계) 무안공항 직항 전세기

공함 주차장 무료이용

대인 피해액 만족도를 주는 광주 MBC 문화방송 상봉합니다(www.kjmbc.co.kr)

기초의 여기저기 산동과 허반이 다릅니다

무안공항 직항 - 광주(광산, 구화산) - 3월 4일 ₩ 243,000 / 4월 5일 ₩ 199,000

무안공항 직항 - 정사(정가계, 원가계) - 3월 4일 ₩ 620,000 / 4월 5일 ₩ 588,000

다들 여기저기 상봉해 "광주 MBC 문화방송"을 시청하십시오. 광주/전남 북 유영이행사 문의 062-226-8070